

저자 (Authors)	김수정
출처 (Source)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8.11, 295-303(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방송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68316
APA Style	김수정 (2018). 팩트체크 방송뉴스의 대상, 검증방법, 결과제시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95-303
이용정보 (Accessed)	서울대학교 147.46.43.*** 2019/08/12 14:4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팩트체크 방송뉴스의 대상, 검증방법, 결과제시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김수정¹⁾ (중앙대)

1. 서론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더 다양한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선택성을 더욱 증가시켜 오히려 편협한 정보만을 탐닉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집단들 간의 의견 양극화는 양측의 차별적 미디어 활용으로 더욱 커질 수 있는데, 사실검증(팩트체크, fact-checking)은 이러한 집단 간 여론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다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선택 혹은 규정하는데 있어 동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의 긍정적인 역할 실현을 기대하게 한다.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 결과가 미디어 이용자에게 설득효과가 높은만큼(김선호·백영민, 2018; 백영민·김선호, 2017), 팩트체크 대상의 선정과 검증과정, 결과물의 노출방식에 대해 언론사는 더욱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제19대 대선시기에 신문과 방송에서 여러 팩트체크(사실확인, fact-check) 서비스가 시도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눈에 띄게 그 수가 줄어든 상태다. 대선 기간에는 정치 이슈가 계속 발생했고, 정치 뉴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 국민의 관심도는 선거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고, 팩트체크할 만한 아이টে들도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보도를 내보내는 것보다도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까지 국내 팩트체크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의 경향성과 검증의 방식, 결과의 노출에 대한 통합적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아란과 이나연, 정은령(2018)이 19대 대선을 앞둔 시기에 국내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분석과 형식적 특징, 내용적 특징을 나누어 분석한 바 있지만 평소시기 방송뉴스의 팩트체크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대상, 검증과정, 결과의 제시라는 큰 틀 속에서 방송용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내용분석해 보고자 한다. 방송뉴스의 팩트체크에서 드러나는 경향성을 살펴보고, 한계점과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방송뉴스 팩트체크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더 신중하게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팩트체크의 조건으로서 검증방식, 결과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국내외 연구동향과 연구문제

1)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출발과 확산

팩트체크를 언론의 본래적 임무로 본다면 시작 시점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팩트체크 붐을 본격화한 계기를 꼽자면 팩트체크 오알지(FactCheck.org)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 of Pennsylvania)의 아넨버그 공공정책 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가 운영한 팩트체크 오알지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이슈에 대한 사

1) su808@naver.com

실검증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들의 목표는 대중은 유권자이기에 이들을 기만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발언과 주장이 있다면 이를 팩트체크하고 공표하여 대중의 정치적 지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데 있다. 비정파적(nonpartisan)이고, 비영리적인(nonprofit)인 소비자보호단체(consumer advocate)를 표방하는 팩트체크 오알지는 이미 공표한 사실검증 내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상반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로잡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사실검증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국회의 증언에서부터 각종 통계 데이터, 증권 거래 자료, 세금 정보 등을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국 자료와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 연구소 등을 포함한 각종 정부기관 및 연구소의 보고서,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적극 활용해서 팩트체크를 한다고 밝혀두고 있다(www.FactCheck.org)

2009년 탐사보도부문 폴리처상을 타면서 더욱 유명세를 얻은 ‘폴리티팩트 닷컴(politifact.com)’은 2007년 문을 열면서 ‘진실측정기(truth-O-meter)’로 팩트체크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냈다고 평가 받는다. 진실(true), 대체로 진실(mostly true), 절반의 진실(half true), 대체로 허위(mostly false), 허위(false), 새빨간 거짓말(pants-on-fire)로 나뉘는 6가지 진위판정은 팩트체크의 대중화는 물론이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했다. 이후 2010년에는 미국에서만 29개의 팩트체크 벤처가 설립됐다(Graves, Nyhan, & Reifler, 2015; Graves, 2016).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정치외교 전문가인 글렌 케슬러가 팩트체커 칼럼을 통해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이미지를 정치인 발언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실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을 보여준 것도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이다.

폴리티팩트 닷컴은 2016년 대선이 있는 후 약 1년간 페이스북과 함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웹사이트 330여 곳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내기도 했다. 팩트체크가 고유명사처럼 저널리즘의 새로운 보도유형으로 주목을 받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2016년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라고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대선 후보 1차 TV토론 당시 뉴욕타임스와 NTR, CNN 등은 실시간 검증시스템인 ‘라이브 팩트체크’를 운영하면서 팩트체크에 속보성까지 보탬다.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플랫폼이 거짓 정보이면서 뉴스의 형태를 지닌 일명 가짜뉴스의 유통경로로 주목되면서 팩트체크의 필요성이 커졌다. 2017년 대선이 있던 프랑스에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플랫폼과 르몽드나 리베라시옹 같은 언론사가 참여하는 ‘크로스체크(crosscheck)’가 설립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2017년 대선기간 네이버와 서울대학교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SNU 팩트체크’가 운영을 시작했다.

2) 팩트체크 기준과 기대효과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언론이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실 혹은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진위여부를 판정해주어 정치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언론 수용자의 권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만이 아니라 사실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능으로 강조되고 있다. 언론이 믿을만한 정보를 검증하는 새로운 기능의 수행을 요청받고 있다는 의미이다(Hermida, 2015).

그레이브스(Graves, 2016)는 팩트체크의 대상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사실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선거 시기 정치광고나 선거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제기하는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이나 주장의 근거에서 믿을만한 정보의 검증이 유권자의 정치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의 발언을 특정 정파나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공표하려는 특징은 과거 정파 저널리즘이나 객관주의 저널리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를 표방하는 뉴스톱(<http://www.newstof.com>)의 운영방침을 보면, 팩트체크 선정에서부터 매일 아침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치인과 공인의 주장을 검색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정보 중 진위가 의심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두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장, 다른 사람들이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나 미래 예측은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주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원칙을 내세웠다.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 IFCN)는 2016년 팩트체크의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IFCN준칙을 공표한 바 있다. 이 준칙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준수, 정보원 투명성 준수, 재정과 조직에 관한 투명성 준수, 방법의 투명성 준수,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 준수를 내세웠다. 2018년 7월까지 54개의 팩트체크 기관이 이 준칙을 준수하는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3) 한국형 팩트체크의 등장과 성격

SNU 팩트체크는 참여 언론사들이 ①공직자, 정치인 및 공직자 (예비)후보들이 토론, 연설, 인터뷰,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발언한 내용의 사실 여부, ②이들 집단과 관련해 언론사의 기사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회자되는 사실적 진술의 사실성, ③그 외의 경제, 과학, IT,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확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적 사안 전반을 검증한다고 밝혀두고 있다.

초기 팩트체크 대상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발언을 다룬 경향이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경제, 과학, IT, 사회, 문화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루머나 화제성 이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팩트체크 작업을 하는 주체들이 신문사와 방송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팩트체크 대상의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 해당 부서들이 협력해서 팩트체크 코너를 운영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정치 영역만이 아닌 여타 이슈에 대해서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언론사의 내부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에서 ‘팩트’를 사실이라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굳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많다. 팩트체크는 사실확인으로, 팩트체크는 사실검증의 의미가 더 있다고 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정재철, 2017). 사실 확인이나 사실검증으로 쓸 수 있지만 현재 한국 안에서는 사실을 확인 혹은 검증하려는 태도나 의지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 영어발음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만 언론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실 확인 임무를 외래어로 부르면서 새로운 종류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듯 주장하는 일은 허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준웅, 2017).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보도에서 팩트체크는 언론의 주요 아이টে็ม으로 등장했다. 신문으로 보면 조선일보에 ‘대선 팩트 체크’, ‘디테일 추적’, 중앙일보에 ‘팩트체크’, 한겨레 ‘짜판’, ‘깨알체크’, ‘팩트체크’, 한국일보 ‘팩트파인더’ 등이 있고, 인터넷뉴스 사이트에는 오마이뉴스의 ‘오마이팩트’, ‘대선후보검증’, 노컷뉴스 ‘이거 레알?’ 등이 있었다. 방송에서는 JTBC의 ‘팩트체크’, MBC의 ‘선택 2017 후보 검증’, KBS의 ‘팩트체크’, ‘대선후보검증’, TV조선의 ‘팩트체크’, ‘대선 팩트체크’, SBS ‘사실은’이 있다. 팩트체크 자체가 좋은 선거보도를 위해서는 일부 사실이지만 전체를 단정 짓는 편파왜곡 보도, 유권자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한 확인과 검증의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팩트체크 자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우리 사회가 사실 확인 및 검증을 위협하는 정도가 커졌고, 이에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 차원의 사실 확인 및 검증 노력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정연구·김수정, 2017).

방송뉴스 팩트체크는 거짓 정보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거짓 정보의 유통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구조적 변화를 동인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뉴스 이용자들이 거짓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식과 검증 과정을 접하면서 이용자의 정보 능력 향상과 사실 검증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임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4) 연구문제

대선시기를 지나 신문의 팩트체크 코너의 운영이 주춤해진 상황에서 방송뉴스의 팩트체크 프로그램은 정기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제작을 하고 있다. 방송뉴스에서 팩트체크 보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1)무엇을 사실 확인하고자 했는지(팩트체크 대상), (2) 어떻게 사실 확인하고자 했는지(팩트체크 방법), (3) 왜 사실 확인하고자 했는지(팩트체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방송뉴스 팩트체크 대상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방송뉴스 팩트체크의 방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방송뉴스 팩트체크의 결과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언론사의 팩트체크는 매체 혹은 채널의 특성에 따라 대상선정, 검증방법, 결과의 노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내 방송뉴스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대선시기 방송뉴스 팩트체크에는 JTBC의 <팩트체크>, KBS의 <팩트체크>, <대선후보검증>, TV조선의 <팩트체크>, <대선 팩트체크>, SBS의 <사실은>, MBC의 <선택 2017 후보 검증> 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실검증 방송뉴스라는 팩트체크으로 JTBC의 <팩트체크>, MBC의 <새로고침>, KBS의 <데이터룸><팩트체크>, SBS의 <사실은> 등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여서 시기를 최근으로 집중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018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각 방송사별 사이트에서 팩트체크 관련 목록을 확인했다. JTBC의 <팩트체크>의 경우 총 600여 건, SBS <사실은>이 2016년 12월부터 140여 건, MBC의 경우 2018년 1월 2일부터 총 45건이 추려졌다. KBS의 경우 2016년 11월 23일부터 60건이 검색되었으나, 방송뉴스 형태가 아닌 인터넷뉴스팀에서 작성한 텍스트 뉴스인 경우가 많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은 팩트체크 방송뉴스 총 785건 중에서 총 20%에 해당하는 양으로 대선시기를 지난 시기에 집중되도록 추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JTBC의 경우 120건, SBS의 경우 28건, MBC의 경우 10건으로 총 158건이 해당했고, 7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순하여 번호를 매기고 끝번호가 XX3, XX5, XX8, XX0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석대상은 구체적으로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분석대상

	MBC	SBS	JTBC
대상보도건수	10	28	120
방송기간	2018.5.2.-2018.7.27	2017.3.8.-2018.7.18	2016.10.19.-2018.7.3

			1.
방송길이	2분54초-4분7초	1분52초-5분42초	3분14초-9분10초
평균질문수	5.7		

2) 분석유목 및 코딩절차

언론정보학을 전공한 학부 4학년과 졸업생으로 이뤄진 코더 2명은 사전코딩을 통해 MBC, SBS, JTBC의 채널별 팩트체크 프로그램 총 35건씩 총 70건을 각 질문별 질문과 답변을 열거하여 팩트체크 대상, 방법,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추려냈다. 이를 기초해서 팩트체크 대상이 어떤 유형인가를 출처별로 분류하는 세부유목을, 검증방식과 팩트체크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 유목을 정리하고 다시 분석대상 팩트체크 프로그램에 적용해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표 3> 팩트체크 분석유목

분석유목	항목	세부항목
대상	출처유형	1. 정부 & 전현직 정치인, 관료, 공무원 발언 내용 확인 2. 청와대 청원 내용 3. 사이트, 게시판, SNS, 소셜미디어 등에 퍼진 확산된 정보 4. 특정 혹은 일부 언론 보도여서 가짜뉴스인지 사실 확인 5. 신설 시행 법, 규정, 규칙의 내용이 궁금한 경우 6. 출처는 알 수 없으나 논란이 있다해서 문제가 된 경우 7. 기타_직접 서술
	주제분류	① 정치 ② 경제 ③ 사회 ④ 문화 ⑤ 식품 ⑥ 의학, 약학 ⑦ 국제(난민법 등) ⑧ 환경 ⑨ 체육 ⑩ 법 ⑪ 기타
방법	방송길이	코너 길이 **분 **초
	질문수	진행자의 질문 수
	검증방식	0. 출처 검증 1. 통계 검증 2. 규정 검증 3. 보도자료 검증 4. 사(史)료 검증 5. (전문기관 등을 통한) 문의 검증 6. 해외 사례 검증 7. 전문가 검증 8. 기타_직접 서술
결과	결과의 제시	① 전혀 사실 아님 ② 대체로 사실 아님 ③ 절반의 사실 ④ 대체로 사실 ⑤ 사실 ⑥ 판단유보 ⑦ 잘 모르겠음

4. 연구결과

1) 팩트체크 대상

<표 4> 팩트체크 대상

		MBC	SBS	JTBC	합계
정치 행위자의 발언	빈도	3	12	66	81
	주제유형 중 %	3.7%	14.8%	81.5%	100.0%
	전체 %	1.9%	7.6%	41.8%	51.3%
청와대 청원	빈도	2	1	1	4
	주제유형 중 %	50.0%	25.0%	25.0%	100.0%
	전체 %	1.3%	.6%	.6%	2.5%
SNS, 게시판, 소셜미디어 소문 확산되 떠도는 이야기	빈도	0	3	10	13
	주제유형 중 %	0.0%	23.1%	76.9%	100.0%
	전체 %	0.0%	1.9%	6.3%	8.2%
특정 혹은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가짜뉴스 확인	빈도	0	2	10	12
	주제유형 중 %	0.0%	16.7%	83.3%	100.0%
	전체 %	0.0%	1.3%	6.3%	7.6%
신설 법, 신설 규칙, 적용대상에 대한 궁금증	빈도	1	2	3	6
	주제유형 중 %	16.7%	33.3%	50.0%	100.0%
	전체 %	.6%	1.3%	1.9%	3.8%
출처 알 수 없는 논란이 있는 경우	빈도	4	8	25	37
	주제유형 중 %	10.8%	21.6%	67.6%	100.0%
	전체 %	2.5%	5.1%	15.8%	23.4%
기타-구분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서술	빈도	0	0	5	5
	주제유형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3.2%	3.2%
빈도		10	28	120	158
주제유형 중 %		6.3%	17.7%	75.9%	100.0%
전체 %		6.3%	17.7%	75.9%	100.0%

정치인의 발언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관료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가 전체 51.3%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체로 이런 유형이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독일은) 2012년에는 파견근로자가 33만명에서 90만명. 근로자 대비 2%, 우리나라는 현재 0.4%입니다. 일본이 1.5%, 미국이 1.8%, 네덜란드는 2.5% (수준입니다.)]

한때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쉬운 해고'와 '파견노동자 확대'로 성장 동력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어제(25일) 정부가 전 정권의 이같은 정책을 폐기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주요국들은 파견노동자를 늘리는 추세인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에서 확인했습니다.

[팩트체크] 파견노동자 확대, 세계적 추세?...확인해보니

2017-09-26

"씻김굿의 제물이다", "십자가를 지게 됐다" 전두환 씨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낸 책에서 말이죠. 자신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이를 역사왜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판결문과 주요 자료들을 수집해 다시 분석했습니다.

[팩트체크] 전두환 "발포명령 없었다"?...검증해보니

[JTBC] 입력 2017-04-03

[김무성/바른정당 의원 (대정부질문 / 어제) :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제(11일) 대정부질문의 한 장면입니다.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정부가 안보를 경시한다는 뜻이라는 주장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국방비가 6.9% 증가한다는 건 사실입니까?

[팩트체크] "국방비 증가율 낮아...안보 경시" 확인해보니

[JTBC] 입력 2017-09-12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유형이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논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23.4%를 차지했다.

[팩트체크] '플라스틱 빨대'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JTBC] 입력 2018-07-11

[팩트체크] 막판 또 등장... '절차 하자' 주장 따져보니

[JTBC] 입력 2017-03-08

[앵커]

탄핵심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니 아예 각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 반대 진영의 이런 주장은 현재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에 불복의 근거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오대영 기자, 하나씩 볼까요?

<표 5> 팩트체크 대상의 주제분류

		MBC	SBS	JTBC	합계
정치	빈도	2	11	50	63
	주제분류 중 %	3.2%	17.5%	79.4%	100.0%
	전체 %	1.3%	7.0%	31.6%	39.9%
경제	빈도	0	0	12	12
	주제분류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7.6%	7.6%
사회	빈도	4	10	17	31
	주제분류 중 %	12.9%	32.3%	54.8%	100.0%
	전체 %	2.5%	6.3%	10.8%	19.6%
문화	빈도	0	0	1	1
	주제분류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6%	.6%
식품	빈도	0	1	3	4
	주제분류 중 %	0.0%	25.0%	75.0%	100.0%
	전체 %	0.0%	.6%	1.9%	2.5%
의학, 약학	빈도	0	0	3	3
	주제분류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1.9%	1.9%
국제(난민법 포함)	빈도	0	0	9	9
	주제분류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5.7%	5.7%
환경	빈도	0	0	4	4
	주제분류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2.5%	2.5%
체육	빈도	0	1	3	4
	주제분류 중 %	0.0%	25.0%	75.0%	100.0%
	전체 %	0.0%	.6%	1.9%	2.5%
법	빈도	4	5	17	26
	주제분류 중 %	15.4%	19.2%	65.4%	100.0%
	전체 %	2.5%	3.2%	10.8%	16.5%
기타	빈도	0	0	1	1

	주제분류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6%	.6%
빈도		10	28	120	158
	주제분류 중 %	6.3%	17.7%	75.9%	100.0%
	전체 %	6.3%	17.7%	75.9%	100.0%

주제분류로 보면, 정치분야가 39.9%로 1순위, 사회분야가 19.6%로 2순위, 법 분야가 16.5%로 3순위로 볼 수 있었다. 정치사회분야에 대한 팩트체크가 많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법 분야에서의 팩트체크가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진 점, 법에 대한 해석 혹은 사례에 대한 조사가 다른 팩트체크 분야보다도 접근이 용이하고 관련한 전문가 의견 취합도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비중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팩트체크] 집행유예 중 범죄 저지르면 집유 취소될까?

[JTBC] 입력 2017-11-23

[새로고침] 성범죄 손해배상 제도...우리는?

[MBC] 2018-05-18

<표 6> 팩트체크 검증방법

		MBC	SBS	JTBC	합계
출처검증	건수	5	19	70	94
	검증방법 중 %	5.3%	20.2%	74.5%	100.0%
	전체 중 %	3.2%	12.0%	44.3%	59.5%
통계검증	건수	7	8	37	52
	검증방법 중 %	13.5%	15.4%	71.2%	100.0%
	전체 중 %	4.4%	5.1%	23.4%	32.9%
규정검증	건수	9	19	92	120
	검증방법 중 %	7.5%	15.8%	76.7%	100.0%
	전체 중 %	5.7%	12.0%	58.2%	75.9%
보도자료검증	건수	0	4	13	17
	검증방법 중 %	0.0%	23.5%	76.5%	100.0%
	전체 중 %	0.0%	2.5%	8.2%	10.8%
사료검증	건수	6	9	56	71
	검증방법 중 %	8.5%	12.7%	78.9%	100.0%
	전체 중 %	3.8%	5.7%	35.4%	44.9%
관할기관검증	건수	0	13	36	49
	검증방법 중 %	0.0%	26.5%	73.5%	100.0%
	전체 중 %	0.0%	8.2%	22.8%	31.0%
해외사례검증	건수	6	1	34	41
	검증방법 중 %	14.6%	2.4%	82.9%	100.0%
	전체 중 %	3.8%	.6%	21.5%	25.9%
전문가검증	건수	0	7	62	69
	검증방법 중 %	0.0%	10.1%	89.9%	100.0%
	전체 중 %	0.0%	4.4%	39.2%	43.7%
복수의 전문가 검증	건수	0	0	3	3
	검증방법 중 %	0.0%	0.0%	100.0%	100.0%
	전체 중 %	0.0%	0.0%	1.9%	1.9%
합계	건수	10	28	120	158
	전체 중 %	6.3%	17.7%	75.9%	100.0%

팩트체크 검증방법에는 규정검증(75.9%)을 통해 분별하는 경우가 전체 3/4을 차지했다. 절반 이상은 논란의 근원지 출처를 검증해 보는 과정을 거쳤고(59.5%), 전문가 검증(43.7%)을 통해 팩트체크에 접근했다. 과거 신문이나 역사자료, 데이터 등의 사료를 통해 사실검증을 시도하는 사료검증이 44.9%를 차지했다. 언론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시도는 10.8%에 불과했다.

<표 7> 팩트체크 결과

		MBC	SBS	JTBC	합계
전혀 사실 아님	빈도	2	13	58	73
	팩트체크결과 중 %	2.7%	17.8%	79.5%	100.0%
	전체 %	1.3%	8.2%	36.7%	46.2%
대체로 사실 아님	빈도	2	5	16	23
	팩트체크결과 중 %	8.7%	21.7%	69.6%	100.0%
	전체 %	1.3%	3.2%	10.1%	14.6%
절반의 사실	빈도	0	3	2	5
	팩트체크결과 중 %	0.0%	60.0%	40.0%	100.0%
	전체 %	0.0%	1.9%	1.3%	3.2%
대체로 사실	빈도	0	0	9	9
	팩트체크결과 중 %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5.7%	5.7%
사실	빈도	2	2	10	14
	팩트체크결과 중 %	14.3%	14.3%	71.4%	100.0%
	전체 %	1.3%	1.3%	6.3%	8.9%
판단유보	빈도	3	5	19	27
	팩트체크결과 중 %	11.1%	18.5%	70.4%	100.0%
	전체 %	1.9%	3.2%	12.0%	17.1%
잘 모르겠음	빈도	1	0	6	7
	팩트체크결과 중 %	14.3%	0.0%	85.7%	100.0%
	전체 %	.6%	0.0%	3.8%	4.4%
합계		10	28	120	158
팩트체크결과 중 %		6.3%	17.7%	75.9%	100.0%
전체 %		6.3%	17.7%	75.9%	100.0%

절반에 해당하는 팩트체크의 결과가 ‘전혀 사실 아님’(46.2%)로 밝혀졌다. 팩트체크의 대상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는데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절반의 사실’ 혹은 ‘대체로 사실’, ‘사실’은 17.8% 수준에 그쳤다.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17.1%에 해당했는데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팩트체킹 뉴스에 대해 이준웅(2017a)은 언론이 새로운 방식의 ‘도덕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한 바 있다. 오보내지 않고 고품질 기사를 쓰고, 선전과 광고로부터 독립된 기사를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는 의미에서다. 언론의 사실 확인은 복잡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내용의 사실성, 내용의 검증가능성, 뉴스로서의 가치 대상,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로서 반박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단의 의미를 가지는 등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진실 주장에 가까운 행위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이준웅, 2017a).

실제로 방송뉴스의 팩트체킹이 사실 확인을 강조해서 더 이상 의견 개진이나 논의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폭력적인 사실성을 주장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라면 집단 간 여론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시민의 의견표명과 토론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는 기본적인 윤리 책임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해야 하는 업무가 새롭게 생겨난 세대 속에서 언론인의 사실 확인 과정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동시에 증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방송 뉴스의 팩트체킹 사례에서 나타나는 대상과 방법,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고, 진정한 의미의 팩트체킹이 실현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현재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 프로젝트의 정교화를 위한 심층적 고민과 성찰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과제를 전개해 보고자 했다.